



NORTH KOREA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박영호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홍우택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CONTENTS

제 4 권 1호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09년 8월

발 행 2009년 8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스)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 · 인쇄 NEULPUM* (주) 늘품플러스

전화 070-7090-1177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과 국제협력 10
- 3. NGO 13
- 4. 분석 및 평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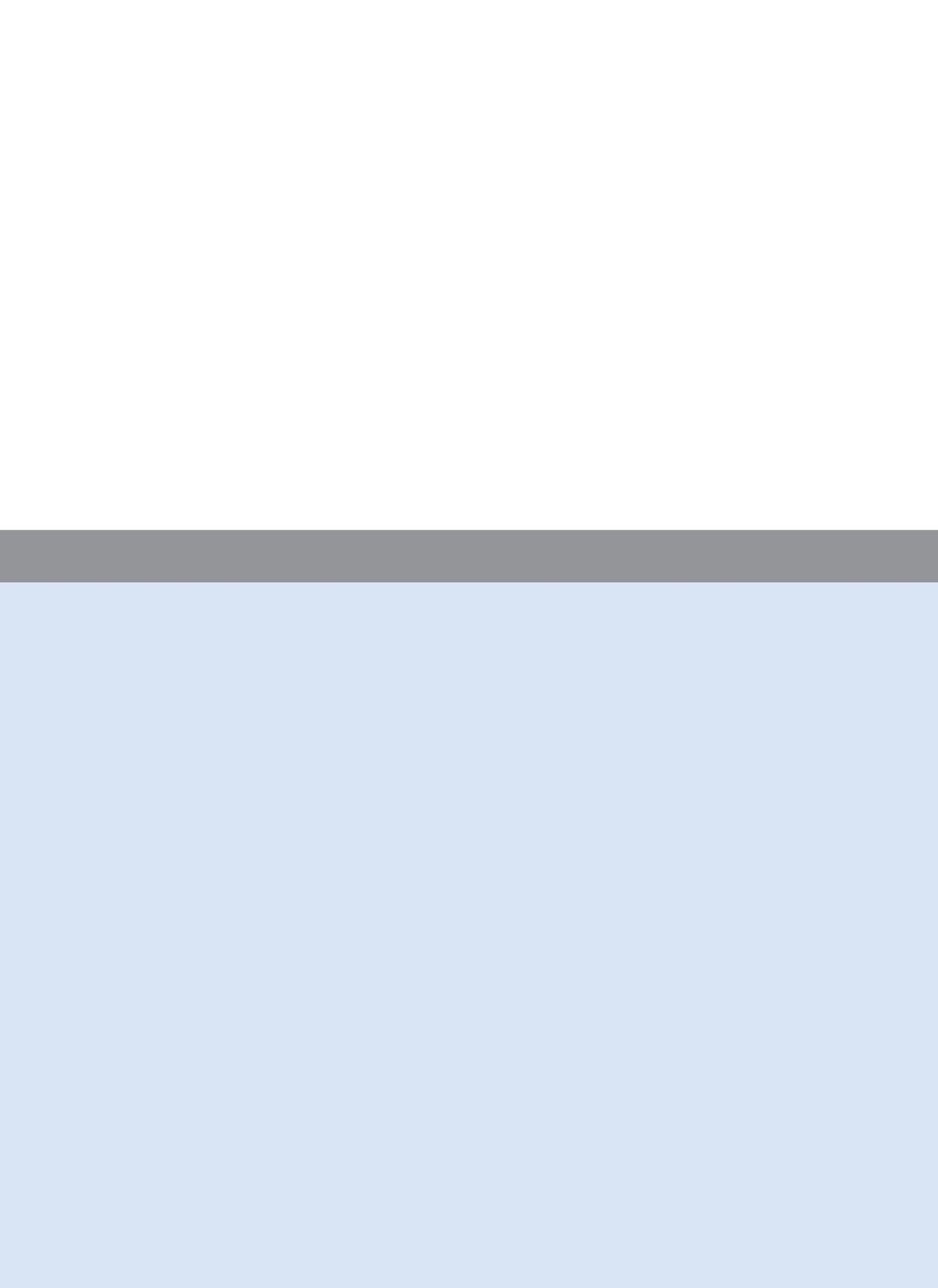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27
- 2. 일본에 대한 반응 29
- 3. 유엔에 대한 반응 30
- 4. 남한에 대한 반응 31
- 5. 분석 및 평가 35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자 39
- 2. 납북자 55
- 3. 국군포로 60
- 4. 이산가족 61
- 5. 분석 및 평가 64



국제사회 동향



1. 개별국가	3
2. 유엔과 국제협력	10
3. NGO	13
4. 분석 및 평가	20

1. 개별국가

가. 미국

미국 북한인권 특사, 참여정부, 햇볕정책 이유로 북한인권 개선에 적대적(1.23)

- 제리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 등 일방적 포용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데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보였다”고 밝힘.
 - 1월 17일 미 의회에 제출한 ‘제리 레프코위츠의 마지막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장애 요인에 한국 전임 정부의 비협조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 그는 “2005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의 몇몇 고위관리들이 나를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언급
 -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 남용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
 - 또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공관들이 위기 상황에서 북한 난민들을 수용하고 보호처를 제공하는 데 대해 (본국으로부터) 분명한 지침을 받고 있지 못해 탈북자들이 공관에서 퇴짜를 맞는다고 지적
- 북한 인권법이 지난 2004년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모두 67명으로 밝혀짐.
 - 미 국무부의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가 1월 17일 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 2006년 탈북자 9명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지난해 33명 등 지금까지 모두 67명이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 정착했다”고 언급하고, “지난 2004년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67명에 불과하지만, 한국 정부가 매년 약 2천 500백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
 - 또한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 8월 현직에 취임한 이후 최우선 과제는 북한 난민이 항구적이고 안전하게 미국에 정착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언급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상황 우려,” 공식 입장 밝힘(1.30)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 인권상황은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상당한 우려사항(something of concern)”이라고 말함.
 - 또 “분명한 것은 북한인권문제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까라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의 일부”이라고 언급, 북한인권 대응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관심사로 다룰 것임을 시사
 - 작년 9월 미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처리하면서 정부에게 탈북자들의 망명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 대사로 임명 요구

미국 전문가, 북한인권 민간차원 제재 필요 주장(2.5)

-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IEE)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탈북자 조사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와 정책대안을 발표함. 그는 미국이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할 경우 인권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유엔기구와 국제적십자사의 북한수용소 접근허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난 1970, 198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한 ‘설리번 원칙’ 같은 민간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함.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해 11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외부의 식량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
 - 식량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설문자 가운데 지원식량이 군대와 당·정 관계자들에게 지급됐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96.1%에 달한 반면, 주민들에게 배급됐을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
 -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암울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며,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의 북한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 ◆ 설리번 원칙 =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맞서 지난 1970년대말 흑인 출신 리언 설리번 목사가 미국 기업에 대해 남아공과의 무역이나 거래를 못하도록 촉구한 민간 운동임. 이후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동조해 국제적인 운동으로 전개됨.

미국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 별도 임명 방침(VOA, 2.23)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특사와는 별도로 적절한 시기에 대북 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관계자가 밝힘.
 -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특사 인선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인권특사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추가로 임명할 것”이라고 언급
 - 지난 해 미국 의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재승인법’은 발효 후 1백 80일 안에 대북 인권특사가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한 ‘대북 인권특사’는 올해 초 제이 레프코위츠 전 특사가 물러나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

오바마 정부, 북한인권실태에 ‘낙제점’ 평가(2.25)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아주 나쁜(abysmal)’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 미 국무부는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해 이같이 평가, 북한 인권실태가 전년에 비해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
 - ‘2007년 인권보고서’는 북한을 미얀마(버마), 이란, 시리아, 짐바브웨 등과 함께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규정
 - 올해 보고서는 2008년에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거나 나빠진 나라, 혹은 지속적으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나라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면서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버마(미얀마), 중국에 이어 북한의 인권상황을 세 번째로 기술
 - 이번 보고서도 작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통치하에 있는 독재국가(dictatorship)”라고 소개
 - 북한의 인권실태내용은 작년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북한정권의 인권실태 기록은 여전히 열악하고, 북한 정권이 많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지하교회,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
 - 한편, 보고서는 “적극적인 인권정책이 미국의 가치임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국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혀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인권을 비롯해 전 세계 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

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 여기자 2명 재판 회부” 보도(4.25)

-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미국 여기자 2명을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 자료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보도
 - 미국의 Current-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 기자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3월 17일 중국과의 두만강 접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등을 취재하던 도중 북한 당국에 붙잡혀 억류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탈북자 면담 예정(VOA, 4.25)

-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특별대표 임명 후 처음으로 오는 27일 탈북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함.
 -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27일 오후 국무부에서 ‘제6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석차 방미중인 탈북자들과 면담할 예정

미국 국무부, “북한 인신매매 최악” 감시대상국 유지(6.17)

- 미국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으로 또 다시 지정함.
 - 미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이란, 미얀마, 쿠바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며,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계속 최악 등급을 유지
 -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정치적 억압 수단의 한 부분으로 강제노동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남성들에게 북한 여성을 파는 인신매매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노동과 매춘 인력 제공국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탈북자들 중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
 -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 중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NGO(비정부기구)의 추정이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 및 북·중 국경지대에 조선족 및 북한인들이 운영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다고 주장
 - 한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최상인 1등급 국가로 분류
 -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 미국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라고 분류된 나라로서, 연속 2회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의 해당 국가 대출을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되어있는 등 별도의 제재 대상국으로 지정

나. 유럽연합과 기타 국가

EU, 국내 대북방송들에 4억원 지원(3.24)

- 유럽연합(EU)과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국내 민간 대북방송 세 곳에 앞으로 3년간 총 4억원의 재정지원을 함.
 - 이를 위해 국경없는 기자회의 장 프랑소와 주이아 사무총장과 자유조선방송(공동대표 한기홍, 이광백),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3사 대표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협약식 개최
 - 국내 민간 대북방송에는 이들 3 곳 외에 북한개혁방송, CMI 광야의 소리 등이 있으며 대부분 영세한 수준으로 열린북한방송을 제외하면 모두 탈북자들이 운영 중

캐나다, 탈북자 16명에 난민 지위 부여(RFA, 5.5)

-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탈북자 16명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한해동안 7명인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전함.
 - 캐나다 이민 난민국의 스테판 매일파트 대변인은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도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 사례가 116건에 달한다”고 언급
 - 난민 심사를 통과해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가 만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이들이 캐나다에서 출산할 경우 태어난 아기는 캐나다 시민권 부여

일본 지식인 7명, 한국 신문에 북한인권 광고(6.25)

- 와세다(早稻田)대 대학원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교수 등 학자, 언론인 7명으로 구성된 ‘의견광고 7인회’라는 명의의 이 광고는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평화롭고 번영하는 동아시아의 실현과 납치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척시키고 싶다”고 밝히고, 광고는 “한일 양 국민은 서로 손을 잡고 북한을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함.

- 광고는 1977년 13세 나이로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씨와 이듬해 납치된 다구치 아에코(田口八重子)씨의 가족사진도 함께 신고 “납치 피해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해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재회시켜야 한다”고 강조

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실태 첫 구체적 조사(1.15)

-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개선”을 올해 특별 사업으로 선정하고 2월부터 북한 여성 인권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가인권위가 구체적인 주제로 북한 내부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향후 3년간 △북한 주민(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파악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북한 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
 - 국내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간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

정부, 유럽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상황 우려 표명(3.4)

- 정부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10차 고위급 세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정부 수석대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
 - 지난해 3월 같은 회의의 발언에 비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the dire human rights conditions)’을 직접 거론했고, 인권 개선 조치도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요구
 -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크게 보면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설명. 박영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인권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고려를 했다면 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연합처럼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분석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3.20)

- 우리 정부는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대북인권결의안 상정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
 -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및 총회 결의 내용을 기초로 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기한 1년 연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12월 북한인권검토에 북한측의 참여 촉구 등을 언급
 - 외교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을 설명

외교통상위원회, ‘북한인권법’ 논란(4.14)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 한나라당 황우여, 황진하, 윤상현,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관련법안은 정부내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현재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안을 개혁법안으로 규정, 적극 처리하겠다는 입장 이지만 민주당은 남북간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 하고 있는 상황
 -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서경석 공동대표는 “북한 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저한다면 영원히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며 “북한 인권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
 - 반면,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동한 연구교수는 “북한의 처지에서선 한국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법으로 포장한 공격무기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이란 거룩한 개념을 체제나 이념이 다른 국가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거룩한 개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설명

제성호 인권대사, “북한인권운동 세계로 확산” 언급(4.29)

- 한국 정부의 인권대사를 맡고 있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북한 인권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한 문제제기”라면서 “악의적인 비방이나 중상이 아니라, 선의의 애정어린 비판”이라며 “우리가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또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를 병행하는 것이 균형 잡힌 것”이라면서 “유엔도 인정하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지, 결코 대결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

2. 유엔과 국제협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1.23)

- 북한의 아동인권 실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제네바 팔레 드 일슨에서 북한의 아동권리이행 협약 실태를 심의함.
 - 북한 정부대표단 단장(리철수 스위스 겸 주제네바 대사)은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과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
 -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북한측 답변은 강운석 아동권리협약 이행 민족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으며, 남한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유엔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아동권리위원회 보고관인 루시 스미스(노르웨이)와 프리드리히 크라프만(독일)은 질의를 통해 북한의 2007년 국가보고서의 투명성 부족 및 내용 부실, 기초 데이터 수집, 종합 과정의 불투명성, 시민사회의 활동 부재 등에 이어, 북한의 여아와 장애 아동, 탈북했다가 송환된 사람들의 자녀 등에 대한 차별, 국방예산에 비해 아동 예산의 상대적 경시 문제 등을 따지고, 북한의 아동사범에 대한 처리, 국적 문제, 교도소 수감자의 출산시 아이 처우 문제 등에 관해 질의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법제부장 강운석은 “형사책임 나이는 14세이며, 14세부터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구류장에 처하지 않고 자택 구속 처분을 해서 1개월 정도 집에서 조사를 하며 그 기간에 학교도 다닐 수 있다”면서 “추후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 사회교양처분을 받게 되면, 이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
 - 하템 코트라네(튀니지) 위원은 “북한에서는 17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질러도 집에서 조사를 받고 사회교양처분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취급한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북한은 낙원”이라면서 답변의 진위에 의혹을 제기
 - 또 다른 위원은 “대표단의 설명대로 라면 너무 완벽한 것 같아 믿어지지를 않는다”면서 “정말로 북한에는 아동교도소가 존재 하지 않는 것이냐”고 계속 질문
 - 이에 북한의 강 위원장은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도 소년교도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자꾸 아니라는데 잘못된 것들을 물어본다”고 해명

- 이번 심의는 1998년 5월, 2004년 6월에 이은 세 번째 심의로서, 북한은 2007년 10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장애인보호법, 형법, 가족법의 개정상황,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양육, 기초의료 및 복지, 교육권 및 취약아동의 특별보호 등과 관련해 도입된 법률과 그 현황을 설명. 또한,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 활동계획, 교육의 보편화에 관한 국가활동계획 등도 소개
 - 이번 심의와 관련, 국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6명이 제네바를 방문해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북한 아동들의 노동 및 경제적 착취, 아편 재배 동원, 18세 미만의 소년병 동원 문제 등과 같은 북한의 아동인권 침해 실태 전달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상황 악화 언급(교도통신, 1,28)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서는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악화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지난해에도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면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전 시스템을 동원한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어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아직도 나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으며 형무소에서의 고문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인권 침해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설명
 - 아울러 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몇 년 전부터 특정 연령 이하의 여성이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히 지난해 말 들어서 더 심해졌다”고 언급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북한 아동노동착취 등 권고안 발표(2.1)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북한에 대한 심의결과와 개선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견해를 30일 오후(현지시간) 공개함.
 - 권고안에는 북한 아동노동착취, 군사교육, 아편재배 동원, 아리랑공연 동원 등에 다양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발표

북한, “식량부족 악화로 800만명 기아에 시달려”(마이니치, 2.26)

- 북한에선 현재 8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워싱턴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이 언급함.
 - 워싱턴 특별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래 식량부족 현상이 악화한 북한의 기아 인구를 8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유엔기구의 대북 식량지원이 180만 명 분량에 머물러 수요와 공급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

- 그는 유엔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그 책임을 북한 당국이 지어야 한다며 거액의 예산이 군사비와 핵무기 개발에 돌려지는 현상을 고쳐 '주민 최우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
- 위트 보좌관은 일본이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계속 거부하는데 대해선 "납치문제를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나 '압력'과 '대화' 중 양자택일이 아니라 균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시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 고위층 생존행태 비판(3.16)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비극은 고위층 인사들이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시키면서 생존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주장함.
 - 그는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그들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환경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
 -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악명 높고 광범위한 인권 위반에 따른 유독한 결과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시급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
 - 단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식량과 다른 필수품의 공급 및 접근 보장, 국가의 간섭 없는 경제생활을 통한 기초육구 충족 및 생계 보완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송환 탈북자 처벌 금지 ▲공개처형 종식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에 대한 침해 종식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협력 등을 촉구. 장기 대책과 관련 "북한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언급
 - 그는 "북한은 또 '선민(先民) 정책'에 기초해 공정한 개발조치들을 채택하고,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부문에 재분배하며, 식량안보와 관련된 더욱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만연한 감시, 정보 시스템을 해체하고 사법, 교도 시스템을 개혁하며, 법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의결(3.27)

- 유엔인권이사회는 26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킴.
 -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과 함께 북한내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결의안은 2009년 12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PR(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북측의 참여를 촉구
 - 우리 정부는 작년 3월에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표만 던졌지만, 같은 해 11월 열린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3. NGO

미국 NGO, 오바마 대통령에 북한 인권 관련 서한(VOA, 2.6)

-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는 1월 27일 보낸 서한에서 작년 연장된 북한인권법의 성실한 이행과 북한인권특사 지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을 요청하고,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함.
 - 특히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십자사 등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전달 노력을 확대하고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강조
 - 세계 70여개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4개국 순방에 앞서 북한 인권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 이 단체는 미·북 간 양자·다자 회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중국 외교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으며, 클린턴 장관이 방일 중 납북자 가족을 만날 것을 제안

북한인권 단체들, 오바마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 요구 서한 전달(2.10)

- 북한인권단체연합회와 탈북인단체총연합회 등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미국대사관에 서신을 전달함.
 - 이들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현재 북한주민의 삶은 극도로 피폐됐고 인권과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정부가 북한 당국의 벼랑 끝 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반핵의 입장, 인권 옹호의 입장을 견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
 -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북한구원운동과 기독교사회책임 등 40여개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로 구성, 탈북인단체총연합회는 30여개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아동권리 실태 고발 책 출간(2.16)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어린이들의 지상낙원”이라고 북한 당국이 선전하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이 각종 군사훈련과 중노동에 동원되는 실태를 고발한 책 ‘왕이라 불리는 아이들’을 출판함.
 - ‘Child is King of the Country’라는 제목의 영문판과 함께 출간된 이 책에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간헐적으로 소개된 탈북 청소년 40명과 성인 탈북자 10명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소개

부산 NGO, ‘북한인권법안’ 철회 촉구(2.18)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부산 중구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의 제정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함.

북한 인권단체, 힐러리 국무장관 방한 맞춰 북한인권 개선 촉구(2.20)

- 기독교 북한인권단체 등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맞춰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과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함.
 - 기독교사회책임과 기독교탈북인연합 등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소속 40여개 단체들은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입국한 지난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복송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법’ 조속 제정 촉구(3.16)

-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 김상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관련 토론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 서경석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상임대표대행은 추사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나라당도 주춤하고 있으나 내용을 최소한으로 해서라도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 발제자인 구본태 서울여대 객원교수는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사회에서 이제는 ‘수령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사고가 퍼지는 등 북한에 자기 개인 힘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민사회가 출현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북지원 정책이 북한 정권을 위한 ‘퍼주기’였다면 앞으로는 인권법 제정으로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

국내외 기독교인, 북한 종교·인권 위한 ‘국제기독교기구’ 창설(3.17)

- 기독교사회책임, 한인교회연합(KCC) 등 국내외 기독교단체 및 교회 목사 54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교회가 나서서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회복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국제기독교기구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들은 “북한 인권과 종교자유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려면 이 일을 위한 기구의 창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교회와 해외한인교회 대표, 각국 교회대표, 평신도 지도자, 정치인, 인권단체 대표, 언론인 등이 대거 참여해 북한의 종교자유 및 인권회복을 위한 국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
 - “북한 돕기와 더불어 종교자유 실현과 인권회복을 위한 일도 병행”을 강조하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와 각 나라의 모든 양심인들이 다함께 나서서 종교자유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
 - 교회예산 1% 적립 방안을 제시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 - 1일(3.20)

- 호주 멜버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 현)과 호주 북한인권 호주위원회(위원장 마이클 덴비 국회의원) 공동 주최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함.
 - 문타몬 보고관은 북한은 즉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식량 및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개처형 등 개인의 안전 및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장기적으로는 국가체제를 개혁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면서 체제를 현대화하는 동시에 '주민우선정책'에 기반을 둔 정당한 발전정책을 세우고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부문에 재할당하라고 언급
 -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38선 이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경악스러운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협력을 촉구
 - 우에다 히데야키 일본 인권대사는 특별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고문, 강제수용소, 사상의 자유제한, 여성·장애인 권리침해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때"라고 주장
 - 제성호 한국인권대사는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며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한층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 - 2일(3.21)

-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 특히 아동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됨. 2001-2008년 북한을 떠난 탈북자 50명(아동·청소년 40명, 성인 10명)을 심층 조사 결과,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지원한 쌀을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 탈북자들은 "남한이 원조한 식량은 군대에 우선 제공되며 나머지는 시장에서 (돈이 있는) 군대나 당원들에게 팔린다"며 "일반 국민에게는 적은 양만 시장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분배된다"고 답변
 -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255만t의 쌀과 20만t의 옥수수가 북한으로 건너갔지만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
 -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 비자금 조성을 위해 '백도라지 농장'이란 이름으로 아편 사업을 본격화했다"며 "어른에 비해 아이들은 아편을 흡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양귀비 잔액 수집에 동원되고 있다"고 언급

- 참혹한 수용소 상황에 대한 실태를 보고함.
 - 확인된 정치범 수용소 6곳에 10만여 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10곳 이상에 30만여 명은 갇혀 있을 것(탈북자 김명도)”이라고 증언
 - “14호 관리소(평남 개천군)에선 2년 동안 15건의 즉결처분을 목격했고, 18호 관리소(평남 북창군)로 옮겨와선 3년 동안 30건 정도의 공개처형을 봤다(탈북자 김용)”고 증언

진보단체,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유엔제출(4.22)

- 진보성향의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북한인권 현황에 대한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실에 제출했다고 밝힘.
 - 이는 올해 하반기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에 따라 북한의 인권을 검토하게 됨에 따라 국내 진보단체의 입장을 전달해 반영시키려는 노력
 - 이 단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 사회의 원리를 고려하고 해석하더라도 인권 분야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노동신문은 지난해 ‘사회주의 제도에서 인권문제는 애당초 제기조차 될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 북한 정부의 인권의식에 우려가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
 - 이 밖에 북한의 군사주의, 사형제도, 식량난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
 - 한편 이 단체들은 남한에서의 북한인권 담론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한과 북한의 인권을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인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제5차 북한인권포럼 개최(4.24)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주최로 ‘제5차 북한인권포럼’이 열림.

미국 ‘북한 자유주간행사’ 한국 정부인사 첫 참여(4.26)

-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림.
 - 행사를 주관하는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디펜스포럼의 수잔 솔티 대표는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사상 최대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며 “새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 인권의 열악함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 미국 상원을 대표해 샘 브라운백 의원이 참석하고 하원에서는 에드 로이스,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 등이 참석
- 올해 행사의 주요 주제는 정치수용소 문제이고, 이를 위해 북한 제15호 정치범수용소(요덕수용소) 출신인 정광일 씨 등 수용소를 탈출한 7명의 생존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증언하는 청문회가 예정
- 7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5월 2일에는 주미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이슈화할 계획
- 이밖에 북한 정치수용소의 참상을 담은 사진전, 다큐멘터리 ‘김정일리아(Kim-jongilia)’를 상영할 예정. 이 영화는 북한 수용소의 참상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개인숭배를 집중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 한국 정부를 대표해 제성호 북한인권대사가 처음으로 참석하며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여성인권연대 등 탈북자 단체 관계자 20여명도 참석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탈북 여성 육성 증언(4.30)

- 탈북여성 2명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여성 인신매매 인권보고서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겪었던 고통을 증언함.
 - 무산광산 선전대 여배우 출신인 방미선 씨는 남편이 2002년 굶어 죽고 나서 아들과 딸에게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일념으로 탈북을 시도했으나 중국에서의 생활은 비참한 삶 그 자체였다고 언급
 - 이어 김영애 씨는 탈북 후 중국에서 겪은 인신매매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증언 배경을 설명
 - 북한인권위는 이날 77명의 중국내 탈북여성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전하면서 “세계가 중국내에 있는 수천 명의 탈북여성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너무나 오랫동안 눈을 감아왔다”고 지적하며, 인권위는 “국제사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

미국 정부, 북한 자유 주간 즈음 북한 인권 상황 개선 의지 언급(4.30)

- 제6회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힘.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스티븐 보스워스 특별대표와 성 김 6자 회담 특사가 국무부에서 탈북자들과 만나 대화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 이어 그는 “미국은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압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

국내외 인권 NGO, 유엔 정례 인권 검토회의(UPR)에 북한보고서 제출(VOA, 5.19)

- 2009년 말로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정례 인권 검토회의(UPR)를 앞두고 국내외의 10개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함.
 - 북한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한 비정부 기구는 미국의 ‘휴먼 라이츠 워치’, 영국의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세계기독교연대’, 벨기에의 ‘국경 없는 인권’,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은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
 - 한국에서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식량 문제와 수감시설의 인권유린 실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아시아인권센터’, 경북대 부설 ‘인권과 평화센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북한 내 종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 이밖에 ‘천주교위원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 사랑방’ 등 3개 단체가 인권 실태보다는 인권에 대한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
 - 유엔인권이사회가 매 4년을 주기로 올해 말에 실시하는 전 세계 1백 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 기록에 대한 정례 인권 검토회의(UPR)를 앞두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4월 20일까지 비정부기구들과 정부 관련 인권 기구들로부터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접수

국내외 인권 NGO, UPR 관련 공조체제 구축(6.29)

-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벌이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2009년 12월초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 대비하여 준비모임을 갖고 이번 UPR을 북한 인권개선 운동의 ‘새 교두보’로 삼기 위해 협력을 다짐함.
 -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 4.19혁명 기념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상황 정례검토 준비 심포지엄’에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 제2차관도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192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에 관해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해 직접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지적
- “앞으로 정부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등 여타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 UPR 심의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
 - 심포지엄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페루, 체코 등 주한 외교관들도 참석
 - 국가별 UPR 제도는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가장 핵심적 제도로, 192개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받음.
 - 한 회기에 16개국씩 심의를 받으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6차 UPR 회기 심의는 12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그에 바탕한 최종 권고문은 이듬해 3월에 나옴.
 - 이 회의를 앞두고 경북대 인권과평화센터, 휴먼라이츠워치(HRW),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이미 지난 4월 북한에 대한 ‘제3자 정보’ 형식으로 10여개의 보고서를 제출

4. 분석 및 평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실태 지속 주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심의(1,23) 및 결과·개선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견해를 공개(1,30)함.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특별보고서(3,16)’ 등을 통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북한 아동노동착취 등 아동인권 개선 권고안 발표
-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킴(3,27).
 - 유럽연합이 주도한 결의안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 북한정권의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디펜스 포럼이 주관하는 제6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주일간 워싱턴에서 개최함.
 - 동 행사에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 등도 참여
 - 한국의 제성호 인권대사가 처음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참여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가 참여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표명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호주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산시킴.
 - 비릿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호주 외무장관, 일본인권 대사 등 참여
 - 동 회의에 한국의 인권대사가 처음으로 공식참여

미국 오바마 신 행정부, 북한인권의제 주요 사안으로 인식

- 부시 전 행정부에 이어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북핵 특사와는 별도로 대북인권 특사를 별도로 임명할 예정으로 밝힘.
-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인 ‘2008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정권의 인권실태 기록을 “여전히 열악하고,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함.
 - 북한의 인권실태를 ‘아주 나쁜’ 상황으로 평가
 -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 기존의 열악한 인권상황 평가 입장을 유지
 - 지하교회에 대한 탄압, 중국에서 발생하는 탈북 북한부녀자들의 인신매매, 강제 결혼·노동 등의 문제점을 지적
 - 향후 미국이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외교적 압박 지속

-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실태보고서(2009. 6)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상황 국가로 평가하고 ‘감시대상국’으로서의 분류를 계속 유지하였음.
 - 북한은 동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악의 등급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2009 연례보고서’에서는 특히 탈북자 중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또한 중국 거주 탈북자 중 80% 이상이 인신매매에 희생되고 있다는 NGO의 추정 보고를 인용하고,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있음을 강조

북한, 미국 기자 2명과 한국 근로자 1명 억류

- 미국의 Current-TV 여기자 2명이 두만강 하구 북·중 국경지역을 취재하다 북한 당국 요원들에 의해 붙잡힘.
 - 북한은 동 기자들을 북한의 법질서에 따라서 평양의 중앙재판소에서 재판하고,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이명박 정부, 북한인권문제에 인류 보편적 가치로 접근 강조

-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외교부 제 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발표함.
 - 북한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다른 남북현안과 분리해서 접근
 -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공감하고, 인권조약 상의 의무 완전 이행을 통한 인권 개선 촉구
-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3.27)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음.
 -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2008. 11) 제 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개선을 주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국내 대북인권단체의 활동 활성화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인권호주위원회와 공동으로 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발
 - 북한구원운동, 기독교사회책임 등 40여 북한인권 관련 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미국의 오바마 신 행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요청하는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2.19)에 즈음, 미국 정부에 대해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

- 북한인권단체연합회는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
- 기독교사회책임, 한인교회연합(KCC) 등 국내의 기독교 단체는 북한 종교자유와 인권 회복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독교기구’ 창설 계획을 발표(3.17)함.
 - 대북지원을 위해 각 교회 예산의 1% 적립 방안을 제시

국내외 NGO,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회의 관련 북한보고서 제출

- 금년 12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 6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회의와 관련, 국내외의 인권 NGO들이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UPR은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핵심적 제도로서 유엔의 192개 회원국이 4년마다 인권상황에 대해 평가받고 권고를 받는 제도
 - 매 회기당 16개국이 심사를 받으며 금년 12월의 제6차 UPR 회기에서는 북한도 대상국 중의 하나
- 이와 관련, ‘휴먼 라이츠 워치(미국)’, ‘국제사면위원회(영국)’, ‘세계기독교연대(영국)’, ‘국경 없는 인권(벨기에)’,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일본)’ 등 국제 인권 NGO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함.
- 국내에서도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한변호사협회’, ‘아시아인권센터’, 경북대 부설 ‘인권과 평화센터’ 등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
- UPR 회의가 유엔의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각 국가가 4년마다 정례적 평가와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북한인권 NGO들은 이번 제6차 회기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운동의 중요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국내외의 인권 NGO들이 제출한 북한인권실태 관련 보고서는 UPR 제6차 회기에서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평가 및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문제와 관련 외교적 압력의 수단으로 작용할 것임.

북한의 대응



1. 미국에 대한 반응	27
2. 일본에 대한 반응	29
3. 유엔에 대한 반응	30
4. 남한에 대한 반응	31
5. 분석 및 평가	35

1. 미국에 대한 반응

로동신문, 미국의 이라크 형무소 인권유린 비난(1.2)

- 관타나모 미군기지과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에서 감행된 포로 학대행위에 대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인권유린을 비난
 - 미국 일간지 및 잡지에 실렸던 미군병사의 자백을 인용하면서 이라크인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은 부시행정부의 승인 및 조직적인 지시에 의해 감행된 것이라고 비난
 - 특히 미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고문방법들은 제네바협약에 의해 금지되었던 잔인한 고문행위라고 주장

로동신문,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 비난(2.26)

- 미국의 북조선인권법 및 인권담당특사의 파견을 북한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한 사상 문화적침투책동이라고 비난
 - 미국은 자본주의의 선전물을 들여보내려고 소형 라디오와 TV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
 - 더구나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썩어빠진 미국식 문화와 생활방식풍조를 전파시켜 북한인민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

민주조선, 미 국무성 인권보고서 발표로 인한 미·중간 긴장조성 보도(3.9)

- 미 국무성의 '2008년 세계각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의 인권호위병 행세를 중지할 것을 주장
 - 특히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항하여 중국이 미국의 인권유린 사태를 밝힌 '2008년 미국의 인권기록'을 발표한 것을 소개

로동신문, 미국의 인권보호 타령 비난(3.22)

-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를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의 일환이라고 비난
 - 또한 미국의 인권보호 주장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국가주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보호를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경제적 제재와

봉쇄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난

-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해당 나라의 사회제도에 불만을 품은 불순분자들을 지원하고 반정부활동을 부추긴다고 비난

민주조선, 비밀 감옥에서의 미국의 인권유린 비난(4.6)

- 3월 10일 유엔인권이사회 논의를 인용하여 관타나모 미국 기지에서의 미국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비난
 - 유엔인권이사회 고문문제담당 특별보좌관 맨프레드 노와크와 인권 및 반테로담당 유엔특사 마틴 쉐이닌은 미국의 비밀감옥운영을 《가장 무시무시한 행위》로 규탄하였다고 인용
 - ‘반테러’ 전쟁과정에서 미국의 비밀감옥들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에 착수할 의향을 표명하였다고 언급

민주조선, 미국의 고문행위 보도에 대한 비난(4.8)

- 미국이 2002년 에티오피아 출신 영국인 모하메드를 체포하여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감하기 전까지 심하게 고문하였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고문과 그 밖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과 처형을 금지할데 대한 협약’ 위반이라고 비난
 - 형 감형을 대가로 고문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 언급

로동신문, 미국이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비난(4.18)

-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허용 부시행정부 고위관리들에 대한 형사소송 움직임 관련 “제가 놓은 뒷에 제가 치인다”며 파키스탄 국경지대 등 미국의 “인권만행 및 이중기준” 비난

로동신문, 아프가니스탄 미군 군사작전 비난(5.14)

-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탈레반 소탕 명분으로 서부지역의 2개 마을을 군용기로 폭격하여 어린이와 여성 등 무고한 시민 100여명이 희생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난

로동신문, 미국의 인권개입 비난(6.4)

-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가인 미국이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면서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주제넘은 오만성의 발로라고 비난
 -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유일한 인권기준은 없으며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제도의 차이, 경제·문화발전수준에 따라 인권기준이 다르다고 주장
 - 미국이 인권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침략과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

2. 일본에 대한 반응

로동신문, 일본의 총련 및 재일본 조선인 탄압행위를 비난(1.5)

- 2008년 10월 일본정부가 '세리사(稅理士)법 위반'이라는 명목하에 북한의 해외교포 조직들을 강제수색한 것에 대해 타민족 말살행위라고 비난
 - 북한의 해외공민단체라 할 수 있는 신주꾸 상공회, 협동조합 및 총련지부 사무소 등을 강제수색 한 것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
 - 이러한 강제수색행위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공세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북한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
 - 또한 일본의 대조선정책을 적대시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이 지난 정권에 이어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그 실례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일본 아소총리의 '2009년 시정연설' 비난(2.7)

- 아소총리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과 '납치, 핵 및 미사일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정치적 흥정일 뿐이라고 비난
 - 국교정상화에 납치 및 핵문제를 거론한것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철면피 같은 행동이라고 비난
 - 국교정상화의 조건은 일본이 과거 죄악에 대해 반성하고 배상을 하며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

로동신문, 일본의 과거청산은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2.9)

- 과거의 침략전쟁과 중대 인권유린범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
 - 과거 일본군 위안부문제, 강제연행, 강제노동문제, 그리고 조선인학살만행등의 죄행을 사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과거범죄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등을 전면공개하고 국제사회는 일본의 인권유린범죄들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

민주조선, 일본의 납치문제 제기 비난(3.4)

-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일시 일본이 납치문제에 대해 미국의 지지와 이해를 구한 것을 구걸외교라고 비난

로동신문, 일본의 납치자 문제 제기 비난(4.21)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하면서 ‘납치문제’를 언급하였는데, 납치문제를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의 행위는 단순히 인권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하였다고 비난
 - 식민지 시기 일제가 저지른 조선인 강제연행, 납치범죄에서 보듯이 일본이 세계 최대의 납치범죄국가라고 비난
 - 일본이 노리는 목적은 결의안을 가지고 조선을 납치 범인으로 몰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과거청산을 유야무야하며 이를 구실로 조선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다고 주장

3. 유엔에 대한 반응

조선중앙통신, 외무성대변인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비난(3.30)

-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 EU와 일본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 아래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찬 ‘반공화국 모략책동’의 산물이라고 비난
 -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하여서는 침묵하면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국가에 대해 선택적으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

4. 남한에 대한 반응

로동신문, 남한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이스라엘의 반인권행위에 대한 표결 기권에 대해 비난(1.30)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에 대해 남한이 미국과 함께 기권한 것을 두고 이명박정부의 인권주장은 모략적인 내막이라고 주장(민주조선, 2.1)
 - 서울 용산사태의 강제철거행위가 파쇼적 폭거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가 인권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

로동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언급관련 교활한 처사라고 비난(2.4)

- 적십자 사업의 전면차단과 남북관계의 파국은 이명박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 탓인데도 불구하고 적십자 회담 재개를 언급한 것은 낮가죽이 두꺼운 행동이라고 비난
 - 남한이 인도주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남북관계의 파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주장

로동신문, 통일부 상생공영포럼 및 남북자 국군포로문제 제기를 도발행위라고 비난(2.12)

- 상생공영포럼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을 합리화하는 놀음이며, 사회각계에 북남대결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반통일 광대극이라고 비난
 - 남북자, 국군포로에 대한 문제제기도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시키려는 도발행위라고 비난
 - 아울러 민간조직인 ‘통일교육협의회’의 운영개선방안이라는 것도 극우보수분자들로 구성하여 통일교육을 대결교육으로 바꾸어 놓는 시도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용산참사사건 비난(2.17)

- 북한 「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용산참사 사건은 “인권말살행위”라고 규탄하며 지난 한해 소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집회 등 南 정부의 “反인권정책” 비난(중통, 2.17)
 - 용산참사는 초보적인 생존권리를 요구하고 나선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인권말살 행위라고 비난(민주조선, 2.19)

로동신문, 한나라당 북한인권법채택 비난(2.27)

-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채택에 동족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난

로동신문,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 및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비난(4.7)

-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도발적인 행동이며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
 - 국가인권위원회 기구를 대폭 축소하려는 조치는 반인권적 정책이라고 비난
 -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하고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시도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이라고 비난(민주조선, 4.7)

민주조선,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비난(4.21)

- 예산절약, 경제 살리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반북인권 소동의 증거라고 비난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는 인권위원회를 반복대결을 위한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라고 비난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보성향의 인물을 축출하고 우익보수 인물로 충원함으로써 ‘반공화국대결책동의 돌격대’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난

민주조선, 남한이 인권불모지라고 비난(4.22)

- 한겨레신문 만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유신 독재자 박정희보다 더 악랄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인용하면서 이명박 정부 집권 후 남한이 인권의 불모지가 되었다고 비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청년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사회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이 사례라고 주장

로동신문,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반복 인권정책이라고 비난(4.29)

-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추구하는 도발이라고 비난
 -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 움직임, 『인권백서』의 자료보강과 정보수집, 외교통상부의 인권대사, 63차 유엔 총회 및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공동제안 등이 이러한 책동의 구체적 사례라고 언급

로동신문, ‘실용정치’는 인권말살정치라고 비난(5.5)

-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대와 외세의존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 ‘실용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남한주민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인권말살정치라고 비난
 - 미국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 용선철거주민에 대한 강제 해산 및 희생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

조선중앙통신,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의 남한인권에 대한 담화(5.7)

-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실용정치를 명분으로 청와대와 내각의 요직, 국가정보원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우익보수 인물들을 등용하고 국회는 주민들의 자유를 유린하는 ‘MB 악법’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
 - 예를 들어 친재벌정책과 재개발의 명분 아래 용산을 비롯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초보적인 생계조건보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이산가족초청 위로행사 비난(5.8)

- 북한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은 ‘이산가족초청위로행사’를 통해 북한에 적대감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
 - 이 행사는 여론을 오도하여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 「조평통」 대변인, 정부의 인권문제 제기에 따른 남북대화 무용론 주장(5.9)

- 우리 정부가 워싱턴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인권대사를 파견하고 외교부가 북한인권과 현대아산직원 억류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은 ‘반북대결책동’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현대아산 직원 억류에 대한 우리 정부 주장 비난(5.11)

-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현대아산 직원 억류에 대해 합의 위반, 인권 침해라는 우리 정부 주장에 대해 ‘반북모략책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사태의 진상을 왜곡하여 남북관계 경색과 개성공단 사업 장애 조성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

로동신문, 이명박 정부의 시위 진압에 대해 탄압이라고 비난(5.12)

- 근로자의 날 집회와 시위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는 명분 아래 폭력시위 혐의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고 비난
 - 생존권리와 민주주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각계 각층 주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도 탄압한다고 주장
 -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의 구실 아래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비난

로동신문, 진보인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5.16)

- 국가보안법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처벌한 사례, 북한의 로켓발사를 축하한 가수 신해철에 대한 탄압,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그 산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등을 들면서 이명박 정부가 진보성향의 단체와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
 - 준법서약제도가 부활되었다고 주장

민주조선, 용산철거민 사건에 대한 정부 정책 비난(5.19)

- 지난 1월 생존보장대책을 요구하던 용산철거 주민들에 대해 경찰과 특공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한 것은 실용정책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을 무시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

- MBC방송의 'PD수첩' 제작자와 당국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네티즌을 탄압하였다고 비난

5. 분석 및 평가

인권침해 사례 부각을 통한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부당성 주장

-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대북적대시정책의 명분으로 북한인권을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
 -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는 세계재패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묵인 아래 미군 기지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집중 거론
 - 미국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근거로 고문방지협약, 제네바협약 등 국제인권협약 인용
 - 일본 내부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북한인권 제기가 부당하다는 논리 부각
 - 일본의 납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일제 하 위안부 문제, 강제연행, 강제노동문제, 조선인 학살 등 피해자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행동이라고 비난
 - 인권 유린국가가 '인권재판관' 행세를 한다는 논리 반복
 - 촛불시위 탄압, 용산철거주민 탄압, 진보인사 탄압,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등의 사례를 집중 거론하면서 남한 정부의 '실용정책'은 '반인권정책'이라고 비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제기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와 날조된 정보를 근거로 내세운 '반공화국 모략책동'의 산물이라는 비난 지속
 - 선택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이중성 문제 지속 거론
-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북한 내부를 분열시키고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
 - 미국이 소형 라디오를 유포하고 대북방송을 통해 정보를 유통시키려는 행위는 사상문화적 침투행위라고 비난
 - 일본이 납치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계하려는 것은 인권적 동기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의 발로라고 비난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을 ‘반북대결정책’으로 규정

- 한국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라는 비난 지속
 -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적십자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주장
 - ‘이산가족초청위로행사’도 북한에 대한 적대감 고취를 위한 행위라고 주장
 - ‘북한자유주간’ 행사 인권대사 파견 등을 거론하며 북한인권에 대한 한·미협력 비난



1. 탈북자	39
2. 납북자	55
3. 국군포로	60
4. 이산가족	61
5. 분석 및 평가	64

1. 탈북자

미국, 난민 수용 목표 8만 명 책정(1.2)

-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이 공동으로 작성, 의회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망명자 수용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난민 수용 목표를 8만 명으로 책정하고, 북한, 중국, 티베트, 미얀마 등 동아시아에서는 1만 9000명을 받아들일기로 함.
 - 미국 정착 탈북자 포함 동아시아 망명자 가족들의 재결합에는 100명을 배정해서 우선적으로 처리
 - 탈북자들을 올해 몇 명이나 수용할지는 명시하지 않고, 탈북자를 개별 심사하는 P(Priority)-1그룹과 가족 재결합 차원의 우선 망명 허용인 P-3그룹에 포함

태국, 밀입국 탈북자 급증(RFA, 1.3)

- 동절기 탈북자 북부 탈출경로인 몽골행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탈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함.

2008년 탈북자 2,809명 입국, 2007년 대비 10.4% 증가(1.5)

-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한해 탈북자는 2천 809여명이 입국했으며, 이는 2007년 2천 544명에 비해 10.4% 많은 규모임.
 - 탈북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당국이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 결과, 2008년 상반기에만 2007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한 1천 700여명이 입국
 - 2008년 8월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전후해 중국이 출입국 사범 단속을 철저히 하고, 하반기 들어 재외 탈북자의 국내 송환 속도가 다소 늦춰져 3천명은 돌파 못함.

종교인 브로커, 탈북소녀 성폭행(1.5)

-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동남아 탈북자 실태를 통해 “탈북한 16세 소녀를 한국인 브로커가 보름간 구금한 채 성노리개감으로 다룬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밝힘.
 - 10대 탈북자 소녀를 농락한 브로커는 북한 동포들의 탈북활동을 지원하는 국내 한 종교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인물
 - 박의원은 “탈북과정에서 브로커들의 술한 비인도적 행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

은 애써 외면해왔다”면서 “탈북자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브로커활동을 양성화 시켜 보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

2008년 한국행 탈북자 75%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 경유(RFA, 1.7)

- 2008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75%인 2천여 명은 태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등 동남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함.
 - 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불법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이민국 수용소에서 생활 하면서 수용소에 들어온 순서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

베이징 주재 UNHCR, 탈북자 보호업무 재개(VOA, 1.8)

- 중국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2008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를 받아들이면서 탈북자를 위한 보호 업무를 다시 시작함.
 - UNHCR은 2008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해 탈북해 중국 내 모처에 숨어 지 내던 김모 씨 일가족 4명을 베이징 내 보호시설에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
 - UNHCR은 지난 2006년 초부터 소규모로 탈북자들을 수용해 보호하고, 이들의 제3국행을 주선해 왔으나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07년 7월 이후 탈북자 수용을 거부
 -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남아있던 탈북자 5명도 체코의 보호시설로 보내 이들 탈북자들은 지난해 모두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
 - UNHCR이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재개하면서,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던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다소 완화됐다는 관측이 제기

탈북 영화 ‘크로싱’ 미국 일반극장 첫 상영(1.8)

- 탈북자 가족의 아픔을 영화화한 ‘크로싱’이 미국 워싱턴 D.C. 시내의 ‘E 스트리트 시네마’에서 두 차례 상영됨.
 - 크로싱이 미국의 상용 극장에서 처음 상영된 이날 미 행정부 및 인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관람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영화 크로싱이 2009년 2월 개최되는 아카데미 영화제의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 극장 상영을 추진해 왔으나, 탈락(1.14)

정착장려금 수혜 북한이탈주민 급증(1.12)

-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각종 정착 장려금 혜택을 본 북한이탈주민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141명이 직업훈련 수료, 자격취득, 취업 등에 주어지는 정착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2007년 583명에 비해 95.7% 증가
 -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에 1인당 최대 70만원 한도 안에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이 집행된 사례가 2008년 1,111명으로, 2007년의 728명에 비해 52.6% 증가
 - 대학에 입학한 경우 학비의 전액 또는 절반을 제공받는 교육지원금 수혜자도 2007년 463명에서 작년 543명으로 17.3% 증가
 - 2008년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자는 2,881명, 수료자는 3,005명으로 재작년의 2,530명, 2,450명에 비해 각각 13.8%, 22.7% 증가

박선영 의원, 재외 탈북자 인권유린 대책 촉구(1.14)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5일 개최되는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상과 대책’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재외공관 태도, 탈북 브로커 등의 성적 유린 및 금품 갈취와 같은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

재중 탈북녀 자녀 초등교육도 못받아(1.15)

- 휴먼라이츠와치(HRW)는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중국 연변지역에는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 남자와 결혼한 탈북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수천 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호적에 등재되지 못해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의 국내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9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가 법률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일부 부모들은 탈북여성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편법을 사용

미국, 2008년 말까지 탈북자 불과 67명 난민 수용(아사히 신문, 1.19)

- 미국의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담당 특사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인용, 미국 정부가 2008년 말까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67명을 난민으로 받아

들었다고 보도함.

- 2006년도(2005년 10월-2006년 9월)에 9명을 시작으로 2008년도에는 33명의 탈북자를 수용

북한이탈주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 도입(1.2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들의 탈북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현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됨.
 -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 기준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한 차례에 한해 정정신청이 가능
 - 이 관련 규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거쳐 2월 초부터 시행

정부, ‘해외 10년 이상 체류’ 탈북자도 정착 지원(1.21)

- 10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도 오는 7월 말부터 법률이 정한 정부의 정착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현행법은 ▲국제형사 범죄자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와 함께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사정 및 체류국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정부는 또 비보호 대상자에 대해 정부가 취적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규정(제9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
 - 그러나 국내 밀입국 후 장기간 위조된 신분으로 생활하다 자수(보호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9조 제5항 신설).

레프코위츠, 미재외공관 탈북자처리 지침 부재 지적(RFA, 1.22)

- 미국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번거로운 심사절차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함.
 - 레프코위츠 특사는 1월 17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개별 난민의 미국 입국에 대한 심사는 국토안보부 관할이지만 심사 과정이 길고 번거로워 미국에 들어오길 원하

- 는 많은 탈북 난민이 대신 한국을 택하고 있다”고 언급
-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미국 공관들도 위기 상황에서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고 조언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처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분명한 지침이 결여” 돼 탈북자들이 경유지에 있는 미국 공관에 “가봤자 돌려보내지거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HR)으로 넘겨질 것으로 믿고 미국 공관을 찾는 일이 별로 없다”고 지적

캐나다, 정착 탈북자 11명으로 증가(RFA, 1,24)

- 2008년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한 탈북자가 총 7명으로 집계돼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가 11명으로 증가함.
 -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스테판 메일파트 대변인의 말을 인용,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현재 130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한국에 정착한 이후 캐나다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가 많아 이를 구분하기 위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지난 3개월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신청을 철회한 사례도 이전보다 1.5배나 늘었다”고 언급

태국, 북한에 탈북자 유입 방지 요구(RFA, 1,30)

- 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 탈북자 유입을 막아 줄 것을 처음으로 요구함.
 - 카셋 피로미아 태국 외무부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외무부를 방문한 오영선 태국주재 북한대사에게 “지난 수년간 제3국행을 위해 태국으로 몰려오는 탈북자들의 태국 유입을 막도록 북한당국이 직접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
 - 태국외무장관은 “오영선 북한대사로부터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고 밝히고 “지난 1978년 5월 북한기관원에 의해 마카오에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아누차 판초이 태국 여인에 대한 행방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
 - 태국 정부의 탈북자 처리 기본방침은 ▲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입국자로 간주한다 ▲강제 복송하지 않는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3국 정착을 돕는다는 3가지
 -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여,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2천-6천 바트(약 8-24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10-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됨.

미국 국무부, 탈북자단체에 재정 지원(RFA, 1.31)

-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한국의 인권단체들에 처음으로 직접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짐.
 - 미 국무부는 자유북한방송, 탈북인권여성연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 탈북자단체와 인권단체에 총 3백만 달러를 지원
 - 미국 국무부는 과거 한국에 있는 북한과 관련한 인권 단체에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NED(국립민주주의기금)'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왔지만, 직접 민간단체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한 것은 처음
 - “미국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안에 근거해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 항목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할 목표로 3백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언급
 -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은 미국 국무부 내의 민주·인권·노동국이 관장하는 사업으로 미국에 전략적으로 비판적인 지역과 국가에서 민주적 원칙과 제도 증진, 인권 향상, 시민사회 건설 위해 1998년부터 시행

탈북자, 중국에서 태국 유입 급증(요미우리, 2.4)

- 북한에서 중국 등을 거쳐 태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수가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이후 급증해 매달 평균 80명 선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함.
 - 올림픽 개최를 위해 경계를 강화했던 중국 당국이 이를 완화하면서 중국내에 잠복해 있던 탈북자의 이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지적
 - 하지만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미얀마와 라오스의 국경에 인접한 태국 북부와 동북부 14개 지역에서 모두 250명(치앙라이 114명, 파야오 94명)의 탈북자를 체포

기독교사회책임탈북동포회, 중국 탈북자 강제복송 중지 촉구(2.4)

- 기독교사회책임탈북동포회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은 탈북자들의 강제복송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항의서한을 중국대사관에 전달
 - 이 단체는 “중국에는 10-30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있으며 이들 중 매주 150-300명은 중국공안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며 “중국에서 자행되는 탈북자에 대한 강제복송과 인신매매, 성노예화 등 비인권적 처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

미국망명신청자(마영애), 한국여권발급(2.6)

- 한국에 정착했다가 참여정부 시절 정치탄압을 이유로 미국에 망명했던 탈북자 마영애 씨가 2월 초 미국 뉴욕 총영사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음.
 - 2005년 6월 여권 만료 후 갱신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지 3년 7개월 만에 여권 발급

캐나다, 탈북자 난민 인정 14명으로 증가(RFA, 2.7)

- 캐나다에 체류한 탈북자 가족 3명이 지난달 난민 지위를 받아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는 14명으로 증가

미얀마서 체포된 탈북자 19명 모두 한국행(RFA, 2.7)

- 2008년 12월 초 미얀마 당국에 체포됐던 탈북자 19명이 태국을 거쳐 최근 모두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짐.
 - 태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단체의 관계관은 이들 탈북자들 가운데 1차로 3명이 지난 2주 전에 출국했으며, 나머지 16명은 이번 주 태국을 떠나 한국에 도착
 - 이들은 2008년 12월 초 탈북 중개인의 안내로 메콩강에서 쾌속 보트를 타고 태국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당시 삼엄한 국경 경비대를 피해 미얀마 영내인 타칠렉 지역의 '루억' 강가에 내리는 바람에 미얀마 당국에 체포돼 지난해 12월 30일 태국으로 추방

대법원, 중국국적 북한주민 탈북자 불인정(2.10)

- 대법원은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했다더라도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탈북자 지원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함.
 - 대법원 1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 함북 온성군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랐으나 부모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만 17세가 되던 1992년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6년 2월 한국에 입국 6월 대한민국 국적, 주거지 임대보증금과 초기 정착금 등 모두 1천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
 - 관계기관 합동신문 때 북한 국적의 부모를 두고 있고 국적, 탈북 경위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

최근 일본정착 탈북자 200여명(2.10)

- 호주국립대학의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최근에 북한을 탈출,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200여명에 달하며, 가까운 장래에 북한 경제가 붕괴하고 식량부족사태가 심화될 경우 일본에 재정착하려는 탈북자들의 탈출행렬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함.
 - 미국 하와이대 동서센터가 발행하는 소식지 기고문에서 지난 1959-1984년까지 일본에서 복송된 일본인이나 조총련 및 그 가족들이 최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탈북, 중국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언급
 -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일본에 정착하려는 탈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에 있던 한국인 9만 3천 340명(일본인 6천 731명)이 복송된 점을 지적

미 의회 조사국, 미국 정착 탈북자 71명(RFA, 2.12)

- 미 의회조사국(CRS)은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모두 71명이라고 밝힘.
 - 미국의 북한 인권, 탈북자 관련 정책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5월, 6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월까지 71명의 탈북자가 제3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했다”고 언급

미국 난민지위 얻은 탈북자 77명으로 증가(VOA, 2.14)

- 2009년 들어 처음으로 탈북자 2명이 미국에 입국해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77명으로 증가함.
 - 미국 국무부 난민 담당 관계자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총 77명이라면서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회계연도에 탈북자 9명이 추가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설명

중국 외교관, 탈북자 처리 긍정 평가(2.18)

- 웨일린 황 주미 중국대사관 정무담당 공사참사관은 “중국내 탈북자 처리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다”고 밝힘.
 - 황 공사참사관은 이날 미 상원 건물에서 열린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세미나에서 “탈북자들은 중국내 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점이 없다”고 주장

탈북자, 태국서 4년간 미국행 대기(RFA, 3.19)

- 미국행을 위해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4년을 기다렸던 30대 탈북자(무산출신)가 미국으로 떠난 것을 보도함.
 - 2008년 초기 미국행을 원하는 단식투쟁을 하다 지방 이민국인 칸차나부리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된 탈북자 중 한 명으로 태국에서 탈북자가 미국으로 가는 것을 1년 여 만에 처음으로 공개

‘천국의 국경을 넘다’ 아시아인권언론상 받아(3.24)

- 2008년 3월 3일자 조선일보 종합 1면 ‘두만강 심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시작된 크로스미디어 기획 ‘천국의 국경을 넘다’가 1년 만에 국내외 언론상 9개를 받는 대기록을 세움.
 - 영국 BBC 방송을 비롯한 세계 방송사들이 ‘천국의 국경’을 특별편성 방영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국회에서 특별시사회를 개최
 - 조선일보 특별취재팀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008년 5월)’을 선두로 ‘북한 인권 공로상(10월)’, ‘국제TV보도물축제 폴란드 카메라옵스쿠라대상(10월)’, ‘로리픽 심층보도 임팩트상(11월)’, ‘대한언론인상(12월)’, ‘한국기자상(2009년 2월)’, ‘삼성언론상(3월)’, ‘아시아인권언론상(3월)’ 등 ‘천국의 국경’은 1년 동안 모두 9차례 언론상 수상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시행(3.25)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각 거주 지역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센터에서 3주간의 지역적응 교육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 26일 배출되는 하나원 124기 수료생부터 시범 실시되는 지역적응교육은 지역사회 이해, 직업 찾기, 심리상담 및 의료기관 이용안내, 학교 진학지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시범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개소(3.27)

- 통일부가 정착초기 지역주민화를 돕기 위해 2009년 “서울, 경기, 대구 등 3군데의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노원구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이 개소함.

- 통일부 부대변인은 “여태까지 하나원을 출소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지 지역에서 적응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이 분들의 지역 정착 초기에 지역주민화를 빨리 돕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

미 연방 항소법원, “탈북자 지원 수감 조선족 망명 자격”(3.28)

- 미국 제9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3월 23일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판에서 미국 이민법원이 2003년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 박해를 당한 조선족이나 중국인이 미국에 망명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함.
 - 2003년 미국 이민법원은 중국 당국이 리 씨를 체포하고 고문한 이유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라기보다는 밀입국자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한 형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라면서, 망명 신청을 거부했으나 다른 세 명의 항소법원 판사 판결문에서 “리씨가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

‘대구하나센터’ 개소(3.30)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대구하나센터가 대구의료원에서 개소식이 개최되어, 통일부와 대구의료원 간 무료진료 협약, 현판식 등이 진행됨.
 - 대구하나센터는 민간단체인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계약, 물건 구입, 은행 이용 등 생활교육에서 취업 알선, 직장 적응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경기서부 하나센터’ 개소(3.30)

-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역 적응을 돕기 위한 ‘경기서부 하나센터’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덕유사회복지관에 개소

탈북자, 한국 지원 줄어 격감, 브로커 활동 중단(마이니치, 3.30)

- 연변조선족자치주 연지(延吉)발 기사를 통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 수가 경제위기 등으로 한국에서 지원이 끊기면서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함.
 - 2009년 중-북한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경 경비가 대폭 강화된데다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한국에서 탈북자를 빼내기 위해 건네는 송금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북한 상하이 무역대표부 대표 부인, 탈북(4.2)

-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심모 대표의 부인 리모씨가 최근 자식들과 함께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 리씨는 남편 심씨가 지난 1월 해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평양에 들어간 시기에 아들과 딸을 데리고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3월 초 국내 입국

통일부, “제2하나원 건설 추진” (4.7)

-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제2의 하나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함.
 - 현 장관은 “북한 이탈주민 문제는 국민의 인도주의 문제이자 인권 문제”라며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나 가도록 지원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탈북인 정착에로 개선 노력” (4.8)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한겨레 중·고교에서 탈북 주민과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좌담회에 “탈북 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탈북 주민과 학생들은 정착과정의 어려움으로 급증하는 탈북주민 수에 비해 부족한 탈북자 교육시설과 거주지 이전의 제한, 구직 문제 등을 꼽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
 - “국민권익위원회가 탈북민의 권익을 위해 직접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거듭 강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 지원 강화(4.10)

- 경기도 제2청은 청내에 탈북자 지원 상담소인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와 직원이 상주하여 탈북

자의 법적 지위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함.

- 경기도 제2청은 도내에 북한이탈주민의 24%인 3,34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부천, 성남, 포천 등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쉼터 등의 도움을 받음.

탈북자 임대주택공급 대폭 축소(4.15)

- 정부가 탈북자 주거 지원과 관련, 주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현행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 비속’에서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 존비속’ 및 ‘직계 비속을 동반하지 않은 형제자매’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오는 7월 31일부터 대폭 축소됨.
 - 탈북자들에 대한 현행 주택 공급 기준에 따르면 미혼인 형제가 함께 탈북한 경우 한 사람 당 주택이 한 채씩 공급되지만 개정 시행령 등이 발효되면 이들에게는 한 주택만 배정
 - 개정안에는 임대 주택에 5명 이상이 함께 거주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태국 방콕의 이민국 본부에서 생활하던 탈북여성 3명 미국행(RFA, 4.30)

-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행에 성공한 탈북 모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어머니는 자식(10대 중반)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위해 한국으로 갈 기회를 모두 접고 끝까지 미국행을 고집하며 딸의 소원을 이루려고 미국행을 실현하였다고 보도함.

미국, 탈북자 미국정착 보호노력 계속(5.1)

- 미국은 30일(현지시각) 탈북자 보호를 위해 미국 내 정착 지원을 포함한 탈북자 보호 노력을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들과 계속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관련한 성명 발표를 통해 “미국은 고향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곤경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 정착 방안을 포함해 이들의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외국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북한에 전단보내기 지원해 달라” 탈북자 단체 미국의회에 청원(5.1)

- 국내거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을 자유롭게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미국 의회에 청원함.
 - 4월 30일 미 의회 위원회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어 깊이 유감스럽다”며 “우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간청한다”고 청원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탈북자 보호 강화 촉구(5.1)

-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09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법에 따른 대북인권특사의 완전한 활동을 요구하는 동시에 탈북자들을 국제적 의무에 걸맞게 보호하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에 촉구하는 등 탈북자 보호, 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탈북자들, ‘주UN 북한 대표부’ 시위(5.5)

- 탈북자들이 5월 5일(현지시간) 뉴욕 ‘주UN 북한 대표부’ 건물 앞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임.
 - ‘미주탈북자선교회’, ‘귀환납북자협의회’, ‘피랍탈북인권연대’가 주축이 돼 진행된 이날 시위에는 북한에서 아버지가 공개 처형된 탈북 청소년 등 4명이 참가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개성공단 남측 직원과 미국 여기자들을 즉시 풀어줄 것, 북한이 탈북자와 주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 유린을 중단할 것을 촉구

미국 정착 탈북자 81명으로 증가(VOA, 5.6)

- 미국의 소리 방송은 4일 공개한 난민 입국현황 자료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 2006년 5월 탈북 난민을 처음 받아들인 이후 미국 내 탈북자 수는 모두 81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보도함.
 - 방콕 이민국 수용소 안에서 미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4명
 -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중서부 켄터키와 콜로라도, 동부의 뉴욕과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남서부 애리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정착

외교통상부, “탈북자 수용공관 보안 강화 지시”(5.6)

- 외교통상부는 2008년 12월 주중한국대사관에 수용돼 있던 탈북자 3명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를 탈취해 도주한 사건과 관련, 각 해외공관에 탈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모든 공관 내 탈북자 수용 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토록 했다고 밝힘.
 - 외교통상부 조사 결과,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업무구역과 탈북자 보호시설은 격리돼 있었지만 탈북자들이 몰래 업무구역 사무실에 숨어들어 이동식 컴퓨터 저장장치를 탈취한 뒤 천정을 뚫고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
 -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

국민권익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정착 간담회(5.7)

- 국민권익위원장은 NK지식인연대에서 ‘탈북 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실태를 파악함.
 - “사회 소외 계층의 권익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양 위원장은 평소 이들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

한국행 탈북자 30여명 중국공안 검거(5.7)

- 열린북한통신은 중국 공안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중국 청도에서 한국에 가려던 탈북자 30여명(유아 등 7명의 어린이 포함)이 4월 28일 중국 공안에 검거돼 곧 복송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공안에 검거된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조선족 브로커들의 안내에 따라 단체 관광객들로 위장해 버스를 타고 중국의 국경도시인 곤명으로 떠나기로 했으나, 이를 탐지한 중국 공안에 의해 모두 체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 하나원 방문(5.11)

- 통일부는 펠리 유엔난민고등판무관보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하여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엔과 협력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협의한다고 밝힘.

박선영 의원, 중국 탈북자 송환 촉구(5.18)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중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군포로 가족 등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특수 신분의 탈북자들만이라도 조기 송환시켜 줄 것”을 요구함.
 - 재외 탈북자 실태 조사를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탈북자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

여성부, 북한이탈주민 여성 인권교육(6.3)

- 여성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 교육과정에 ‘여성인권 통합 교육과정’을 신설해 3일 첫 교육을 시행함.
 - 이번 교육과정은 2000년 이후 새터민이 급증했고 이들 중 여성의 비율도 3년간 평균 76.8%로 높아 새터민 여성의 인권교육(‘결혼과 가족’, ‘여성과 인권’ 등)에 대한 필요성 증가

탈북자 일가족 4명 난민지위 미국 입국(RFA, 6.4)

- 동남아 제3국에 있던 탈북자 일가족 4명이 미국에 도착해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86명으로 증가함.
 - 서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불법 신분으로 별목공으로 일하면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4번이나 강제북송과 탈북을 반복

경기북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개소(6.8)

- 경기도 제2청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가족상담교육원이 위탁 운영하는 경기 북부 하나센터를 개소함.
 - 북한이탈주민이 경기 북부 지역에 전입하면 3주간 문화, 의사소통, 생활정보 등 지역 적응 교육을 하며, 직업교육, 복지, 의료, 아동보육, 청소년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과 경기도 시·군 산하기관 등에 취업을 알선
 - 경기도는 부천(서부권)과 포천(북부권)에 이어 동부권과 남부권에도 하나센터 설치 계획

중국 체류 탈북자 1만 1천명선 유지(RFA, 6.18)

-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난민·이민자위원회(USCRI)’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중국 내 탈북자 숫자가 2008년 말 현재 1만 1천여 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USCRI의 벤 샌더스 정책조사연구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북한 당국이 각각 국경 지역의 경비를 크게 강화했고, 북한의 식량난이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졌기 때문”이라며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

하나원, 홈커밍데이 행사 개최(6.27)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60여명을 초청해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함.
 - 한편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과 초기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1999년 7월 8일 개원했으며 1만 4595명이 사회적응 교육과정을 수료

국내 탈북자 과반 “나는 북한 사람”(6.30)

-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의 설문조사(255명)에 따르면,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의 58.4%가 자신을 남한이 아닌 북한 사람으로 여기는 반면 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주민의 편견 이유에 대해 탈북자의 34.9%는 ‘못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꼽았고 ‘북한에서 왔기 때문’ 28.6%, ‘북한 정권이 싫기 때문’ 22.4%, ‘사회주의에서 살다와서’ 14.1% 순으로 응답
 - 남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탈북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는 이유로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남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서’ 29.0%, ‘북한에서 왔기 때문’ 24.2% 순으로 응답

하나원 분원 양주로 이사, 규모 확대(7.3)

-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분원(分院)이 경기도 시흥에서 경기도 양주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으로 이전함.

- 현 시흥 분원은 최대 100명까지 동시 교육이 가능한 반면 양주의 새 분원은 250명까지 교육 가능

2. 납북자

중국 체류 납북어부 윤종수씨 송환 요청(1.13)

- 피랍 33년만에 탈북, 중국에 머물고 있는 ‘납북어부’ 윤종수(67)씨 가족은 국내 송환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중국에 협조를 호소함.
 - 윤씨의 가족은 납북자가족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당국이 윤씨 송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 “국가보위부가 윤씨를 ‘민족반역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배부했다”고 소개
 - 1975년 8월 동해에서 조업중 납북된 어선 ‘천왕호’의 선원이었던 윤씨는 작년 5월 부인과 딸을 대동한 채 탈북을 시도했지만 부인과 딸은 체포되고 자신만 주 선양 총영사관 진입에 성공

정부, 납북자정보 DB화 착수(1.27)

- 정부는 통일부 산하에 납북자 대책 전담반(TF)을 구성, 납북자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과 납북자 관련 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를 대비한 준비 작업”으로 설명

박선영 의원,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법률안 대표발의(1.27)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에 의해 납치·강제 복송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법률안 취지를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 납치·강제 복송 사건은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제4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명백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라고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전시 납북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정부, 납북피해자위로금 6억 9천만원 의결(1.30)

- 제13차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17건의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심의를 통해 17건 모두에 총 6억 9천 2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함.
 - 정부 납북자관리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1967년 ‘남풍호 사건’을 납북사건으로 처리해 당시 납북된 선원 3명의 가족에게도 피해위로금 지급을 결정(총 납북역류자의 수가 494명에서 500명으로 증가)
 - 1967년 12월 21일 새벽 거진항을 떠난 남풍호는 동해 어로저지선 인근에서 명태잡이 조업을 하던 중 낮 12시30분께 북한 함정에 받쳐 침몰, 선원 6명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족들은 당시 북한방송을 근거로 이들 중 3-4명이 납북됐다고 주장

북한매체, 납북자 거론에 “싸움판 속셈” 비난(2.10)

- 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최우선 해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려는” 반복 모략소동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서푼짜리 기만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홍 차관이 지난달 28일 K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남북회담이 재개되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 “앞으로 북남대화가 열려도 그것을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대화마당을 싸움판으로 만들 속심(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

전시납북자 2천500명 ‘직업별’ 명부 발견(2.20)

- 한국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을 직업별로 분류한 자료와 월북자 수를 1만 271명이라고 집계한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됨.
 -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작성된 직업별 납북자 명부와 납북자와 월북자를 따로 분류해 ‘1952년 3월 현재’로 집계한 숫자를 담은 1954년

판 ‘한국연감’을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국연구원에서 발견

- 주로 납북자들의 부인들로 구성된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부산 피난 시절인 1951년 8월4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명부는 총 2천 514명의 납북자를 정부 요인급 관공리 328명, 법조계 88명, 교육계 113명, 언론계 79명, 실업계 391명, 의사 및 의학계 40명, 은행가 및 회사원 209명라고 언급
- 또 기독교 31명, 군인 및 군속 119명, 경찰관 및 형무관 209명, 동회장 및 동회 직원 83명, 학생 120명, 예술가 20명, 무직 95명, 청년단 및 민보단 442명, 기타 129명과 함께 ‘미국 대사관’으로 분류된 18명도 이 명부에 포함
- ‘기밀(Confidential)’이라고 찍힌 이 명부는 영문 이름도 병기돼 있어 당시 존 무츠주한 미국 대사 등을 통해 유엔군과 북한군간 포로 교환 협상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협의회측은 설명

정부, 귀환납북자 3명에 정착금 의결(2.27)

- 제14차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는 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건 등을 의결함.
 - 귀환 납북자 3명에 대한 정착금 및 주거 지원금 지급과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 위로금 지급 등 총 14건에 대해 8억 7천 400만원을 지출키로 결정

중국체류 납북어부 윤중수씨 귀국(3.3)

- 피랍 33년만에 탈북, 9개월가량 중국 선양(瀋陽)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던 천왕호 ‘납북 어부’ 윤중수(67)씨가 2월 하순 귀국한 것으로 알려짐.
 -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윤씨가 작년 5월 탈북해 선양주재 총영사관에 들어간 이후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다가 최근 국내에 들어왔다”며 “윤씨는 조만간 가족들과 상봉할 것”이라고 설명

정부, 납북자가족 위로금 7건 의결(3.30)

- 제15차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는 30일 7건의 보상건을 심의, 위로금 2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위원회는 이날 제15차 회의에서 납북자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건을 논의, 7건 모두에 총 2억 957만 3천원을 지급키로 의결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 일본 납치피해자가족 대표 방미(산케이, 4.23)

-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대표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NGO)가 미국에서 개최하는 '북한 자유주간'에 맞춰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이즈카 대표는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다시 지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시 행정부의 후반과 같은 대북 유화정책에 빠지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

‘북한이라는 이름의 지옥’ 재미일본인 NY타임스 전면광고(4.28)

- ‘7인 그룹’이라는 명의를 이 날 광고는 ‘북한으로 불리는 지옥을 너그럽게 봐주시렵니까?’라는 제목의 헤드카피와 함께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북한의 납치 문제와 인권 유린을 해결하도록 나서줄 것을 호소함.
 - 광고에는 1977년 북한의 간첩선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요코타 메구미씨가 두 동생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비롯,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항공사진, 탈북자를 돕다 납치된 김동식 목사 등 3장의 사진 게재
 - 7인 그룹은 일본의 언론인 아리타 요시후씨 등 4명의 언론인과 2명의 교수, 1명의 음악비평가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정성을 모아 광고비를 충당했다”고 설명
 - 광고는 “북한에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들이 상당수 있으며 최소한 500명 이상의 한국인과 레바논, 루마니아, 태국, 마카오 싱가포르 등에서 사람들을 납치했다”면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2000년 북한의 요원에 의해 납치된 김동식 목사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영주권자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웃이기도 했다”고 언급

정부, 파월 국군 납북 의혹 첫 인정(4.28)

- 제16차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국군의 납북 의혹을 사실로 처음 인정하고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주기로 결정함.
 - 1966년 9월 베트남전 도중 실종됐다가 1967년 북한 방송에 등장해 ‘자진 월북자’로 분류됐던 안모(비둘기부대 건설지원단, 실종 당시 하사)씨를 베트남 현지조사 등을 토대로 납북자로 인정

- 파월 장병 납북설은 지난 2000년 한 참전 군인이 “월맹 포로수용소에 붙잡혀 있을 때 북한행을 택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수십 명의 국군 포로가 베트남에서 북으로 끌려갔다”는 내용의 수기 등을 출판하면서 본격 제기

귀환 납북어부 진정팔씨 별세(5.3)

- 납북자가족모임은 귀환 납북어부 8명 가운데 진정팔씨가 처음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힘.
 - 1967년 4월 서해 어청도 근처에서 어선(천대호)을 타고 고기를 잡다 납북돼 34년간 억류돼 있다 2001년 9월 극적으로 북한 탈출에 성공
 - 지난해 말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음.

납북민간인 첫 유공자 등록(5.6)

-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967년 6월 어선인 풍복호를 몰고 선원 7명과 함께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 중 납북된 민간인이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됨.
 - 한국전쟁 당시 미국동군사령부 소속 ‘8280 유격부대(일명 유격백마부대)’에서 활동한 최원모 씨를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 등록
 - 동 부대는 한국전쟁 당시 서해 도서지역을 오가며 유격전을 펼쳐 북한군 3천 명을 사살하고 중공군 600여 명을 생포하는 등 전과를 올렸으나, 대원 552명이 전사
 - 최 씨는 유격부대 유일한 동력선인 40t급 ‘북진호’의 함장을 맡아 보급과 포로 수송, 부대원과 민간인 대피 등을 담당하였으며, 압록강 입구 해상작전에 출동해 적 보급선을 나포하기도 함.

일본 납북자단체, 북한에 팩스로 전단 발송(RFA, 5.19)

-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일본인납북자단체인 ‘희망을 위한 납북자 구조센터(ReACH)’가 팩스를 이용해 북한 평양에 전단을 보냈다고 보도함.
 - 센터는 일본의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입수한 평양의 대외기관과 사업체의 팩스 번호 약 200여개를 전달받아 2월부터 일본과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해당 팩스 번호로 전단 발송
 - “전단을 팩스로 보낼 경우 북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양의 엘리트 계층에게 직접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만 보상은 ‘합헌’ (6.26)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기각) 대 2(위헌) 의견으로 한국전쟁 납북자 가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함.
 - 2008년 5월 “부친이 전쟁 중에 납북됐는데도 법적인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 ‘전시’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는 자국민 납치를 막기 위한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고 ▲납북인지 월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시간이 오래되어 대규모 납북에 대한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임.
 - 그러나 송두환 재판관과 이 사건의 주심인 김종대 재판관은 “헌법 전문과 국방의 의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쟁 중 납북자에 대해서도 보상 관련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

3. 국군포로

국방부, 국군포로 ‘사회적응교육’ 명문화(2.28)

- 국방부는 국군포로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신설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함(3월 31일 발효).
 - 국방부 장관은 남측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증진 ▲경제활동 및 법률상식에 대한 이해증진 ▲포로생활 및 탈북과정에서 얻은 심신 장애 치유 ▲자립과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한 사항 등을 고려해 사회적응 교육(6개월 범위) 내용 결정
 - 국방부는 2008년 12월 24일부터 지난 2월 17일까지 2008년 11월 귀환한 국군포로 이모, 왕모씨를 대상으로 사회적응 교육을 시범 실시
 -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경제 및 법률, 일반상식, 건강, 심리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효과는 기대이상이었음.

4. 이산가족

대한적십자사, 남북 적십자대화 재개 추진(1.5)

- 대한적십자사는 2009년 북한 적십자회와 대화 재개를 적극 타진할 계획임.
 - 국제적십자자연맹의 국제회의 등에서 “남북 적십자간 교류는 인도주의 문제이므로 정치성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들에게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방침
 - 대한적십자사는 연맹 직원들이 북한의 수해 복구사업을 위해 북한을 수시로 드나드는 점을 활용, 간접적으로나마 인도적 차원에서 우선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북한적십자사 측에 제의할 예정

통일부, ‘설맞이’ 고령 이산가족 위로방문(1.19)

- 통일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통일부 장관 및 차관을 비롯한 간부 12명은 설을 앞두고 전국 9개 지역에서 형편이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들을 방문, 위로금과 위로물품을 전달할 예정임.
 -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19-24일 서울·부산·대구·인천·대구·광주·전주·춘천·제주 등 9개 지역에서 80대 이상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 방문키로 하고, 19-23일 이산가족 교류설명회를 개최
 - 서울·인천·대전·수원·춘천 5개 지역에서 각각 30여명 이산가족을 초청해 상생 공영정책과 함께 이산가족 교류현황, 이산가족 교류지원제도 개선 등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

통일부,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2억 9천 만 원 지원(1.22)

-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2억 9760만 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함.
 - 통일부 대변인은 2008년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3국을 통해 314건의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됐다”며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2000년부터 동결된 이산가족 교류비용 지원 단가를 다소 인상, 총 2억 9760만원을 무상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

통일부, 남북이산가족 제3국 상봉지원비 인상(1.26)

-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비용을 그동안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함.
 - 납북자, 생활보호대상자, 국군포로 가족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정부가 일반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비해 최고 2배까지 지급하므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상봉경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
 - 제3국 상봉 외에 생사확인 지원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교류지속 경비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북한적십자사, “대북정책 미래지향해야 이산상봉 가능”(2.6)

- 북한 적십자사 측은 작년 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조선 적십자사 측은 2008년 12월 1-2일 마카오에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적십자 동아시아 지도자회의에서 우리 측 대표가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언급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
 - 유 총재는 “북측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남북 적십자간에 대화가 이뤄져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바가 제기되면 지원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북측 대표들은 ‘권한이 없다’ 며 듣기만 했다”고 소개

미국 의원들, 한인 이산가족상봉 지원(RFA, 2.13)

- 미국 의회의 이산가족위원회 공동의장인 마크 커크(공화) 하원의원과 짐 메더슨(민주) 하원의원은 재미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북한에 압박을 가해줄 것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 커크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대표들을 면담,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에 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때보다 재미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언급
 - 재미한국계시민연맹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있는 전국5도민연합회, 재미시민연맹, 한·미 공공정책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이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서한을 커크 의원을 통해 전달할 예정

통일부, 이산가족 상봉 중단 장기화에 '설명회' 개최(4.27)

-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남북 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009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하기로 함.
 - 위로행사는 1부 정책설명회와 2부 참관으로 구성되며, 남북출입사무소·도라산역·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남북 분단과 교류의 현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
 - 참석자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미상봉 이산가족들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
 - 대한적십자사 및 하나원 의료진은 행사에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의료검진도 실시할 예정

미국 90대 한인, “북한가족 상봉” 미국의원에 호소(5.3)

- 올해 98세인 재미교포 리근 씨는 6.25 전쟁 때 북한에 두고 떠난 부인과 6남매를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미 하원의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에게 요청함.
 -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리씨는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한 달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부인과 3남 3녀를 남겨둔 채 미군을 따라 홀로 월남했지만 이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60년 가까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날을 염원
 - 미 상원과 하원은 2001년에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8년 1월에는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미국 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관련 법안을 발효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유전자 은행 설립 추진(5.13)

- 대한적십자사는 1세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를 감안, 사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은행’을 설립하고 이들의 ‘유언 영상편지’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 영상편지는 상봉 유무와 상관없이 고령 이산가족의 자료를 영상과 함께 입력, 저장했다가 나중에 ‘마지막 메시지’로 북녘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예정

미국 의회, 국무부에 이산가족 담당 조정관 임명 요청(RFA, 6.26)

- 미국 의회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북한의 이산가족과 상봉하는 문제를 다룰 조정관(coordinator)을 임명하도록 국무부에 요청함.
 -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23일 국무부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무부에 한인 이산가족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내 고위 관리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해 처리하도록 요청
 - 의회는 또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필요하다면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다룰 조정관(coordinator)을 임명해 국무부가 재량권을 갖고 미국 내 한인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

5. 분석 및 평가

태국정부 탈북자처리 부담 가중

- 태국정부는 탈북자를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여 재판 처벌 후 추방형식을 통해 대한민국 및 미국 등 제3국 정착을 허용하여 왔으나, 지속적으로 유입규모가 증가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평가됨.
 - 태국 외교부 장관은 주태국 북한대사에게 북한이 탈북자의 태국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 태국의 탈북자 처리대책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태국정부의 외교적 부담은 가중
 - 주요 국내입국 경로가 태국이라는 점에서 태국정부가 북한정부로부터 예상되는 반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도 평가

재외 탈북자의 인권보호 촉구 지속

- 조선일보 등의 재외탈북자 실태에 대한 기획보도를 계기로 재외 탈북자에 대한 국내 외적 관심이 지속되었으며, 박선영 의원의 해외실태조사를 통해 탈북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및 재외공관의 탈북자 대책의 문제점이 새롭게 부각됨.

- 국내입국 주선을 명목으로 브로커 및 관련단체들에 의해 발생하는 탈북여성 성폭력에 대한 처벌 필요성 부각
- 재외공관 탈북자 보안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관내 탈북자 보호관리대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보완 지속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함.
 - 중국 등 제3국 체류 10년 이상인 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지원 관련 규정 추가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국국적 탈북자의 정착지원 요청의 부당성 재확인
 - 국내입국 1년 이후 정착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을 위해 하나센터(경기서부, 서울북부, 대구, 경기북부)가 시범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원 교육이후 3주간에 걸친 지역적응교육이 제도화됨.
 - 지역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관을 통해 위탁운영

전시 납북자 명예회복에 대한 관심 증대

-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쟁 중 북한에 의한 조직적인 납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문서 발굴작업을 지속하였으며, 박선영 의원은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 납북자 가족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납북자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서 전시 납북자가 제외된 것은 형평성 위반이라는 헌법 소원 제기

납북역류자 명단 추가 발굴

-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회위원회는 납북피해자의 피해위로금 및 정착지원금 심의 과정에서 기존 납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 발굴함.
 - 베트남 참전 안모 하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납북피해자로 인정
 - 1967년 ‘남풍호’ 사건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이산가족 위로행사 지속

- 당국 간 관계경색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대북정책 설명 및 위로행사를 지속함.
 - 대한적십자사는 유전자은행 및 영상편지 제작을 검토
 - 제3국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확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규모 확대

미국정부 한인 이산가족 지원 촉구 증대

- 전국5도민연합회, 재미시민연맹, 한·미 공공정책위원회와 같은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미 의회 이산가족위원회 등이 미국정부에 대해 한인이산가족 지원을 촉구함.



제4권 1호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 HUMAN RIGHTS